

특별기고

광주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안전 선물’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약’이라는 가정의 현실이 되곤 한다. 갑작스러운 화재, 늘 이용하던 버스에서의 사고, 혹은 뉴스에서나 보던 사회 재난이 내 가족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함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신체·정신적 치유와 함께 경제적 뒷받침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시가 모든 시민을 위해 준비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 봐도 좋겠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안전망 중 하나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자동 가입’이라는 점이다.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주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돼 있는 개별 보험과도 중복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지급했던 사례로는 버스 이용 중 하차하기 위해 자리 이동 중 낙상한 A씨, 버스 급정거로 다친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택시 탑승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C씨는 500만원을, 스쿨존안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에 경미하게 다친 D씨는 20만원을, 개인소유 전기자전거 이용 중 사망하신 E씨는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작업 중, 발일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시민은 자연재해 사망으로 보고 각각 2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한해 동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133건의 사고에 대해 약 34억원이라는 소중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그 가치를 증명했다.

수입을 완전히 잃어낼 순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 앞에 선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골든타임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올해는 더 촘촘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 이른바 ‘필수 4종’을 포함한 13개 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

2022~2024년 기준 우리 지역 내 성폭력 범죄는 하루 평균 2.7건으로 그중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1.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관계단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역 여성계 등의 의견에 응답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시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시·구 간의 보장항목의 중복은 피하고 보장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자연재난 사망, 후유장애 등 보다 급격한 재난 사고를 책임지는 구조로 하고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나 상해진단 위급금, 화상수술, 은밀질질잔디반 등 생활 밀착형 항목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를 통해 확인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민안전보험도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험혜택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 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분들도 보험 청구의 권리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

안전은 권리이며, 시정의 최우선 가치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약속이자,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막함 속에 계신다면 주저 말고 시민안전보험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

기고

“삼팔이 온다” 평등·평화·생명을 향한 시간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전 공동회장



우리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는 ‘똥’과 ‘장미’ 모두 필요하다. 이 오래된 구호는 과거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참정권 쟁취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다. 1908년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맞서 “우리에게 똥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여기서 ‘똥’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장미’는 존엄과 평등, 인간다운 삶을 의미했다. 이 외침은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한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말하는 지속가능발전 역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 성장만으로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안전한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회는 지속 가능해진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제시하는 빈곤 해소,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 평화와 정의의 가치는 결국 ‘똥’과 ‘장미’를 모두 보장하는 사회를 향한 약속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성차별이 해소됐다고 말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통계에

포함한 1992년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인류 문명과 함께 이어져 온 여성폭력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언어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회를 살아오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내며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여전히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게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의 조건이며, 지구 위의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돌봄과 연대의 기반이기도 하다.

지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상상은 광장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줬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이어져 왔다. 민주화와 통일, 여성해방, 성별임금격차 해소, 미투혁명,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며, 성평등을 향한 연대의 장으로 확장돼 왔다.

다가오는 제41회 세계여성의 날 슬로건은 ‘빛의 혁명을 완성하라’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사회적

요청이다.

빛의 광장을 가득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에 이제는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

삶을 파괴하는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 여성폭력과 기후재난, 차별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이유다.

여느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며 콘크리트 건물을 뒤로 한채 라디오에서는 세계 곳곳의 전쟁 소식과 정치권의 갈등이 흘러나오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가 마치 평화를 만들어낸 영웅처럼 소비되는 뉴스들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과학과 기술에 온전히 맡겨도 되는가. 인간의 조건이 지구라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3·8이 온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을 느끼며 세계여성의 날을 기다린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연대의 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외치는 광장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의 삶을 마주하며 빛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세운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차별 없이 존엄하게 존재할 권리, 그리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권리를 향한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그것은 단지 하루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묻는 시간이다. 성평등과 평화, 생명의 존엄을 향한 약속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다.

취재수첩

‘국민먹거리’ 위협하는 담합, 뿌리 뽑아야

윤용성  
산업부 기자



최근 국민 생필품인 밀가루, 쌀 등 물가를 수년간 담합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먹거리 폭등의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 등이 주로 지목됐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기업의 영업행태도 이를 부추킨 셈이다.

천정부지로 솟는 밥상물가도 인한 소비자 고통이 원

자재 가격 인상, 환율 등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과점 기업들의 만행이었다는 점에서 한탄스러울 뿐이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주요 제분업체들의 담합규모는 총 9조 9409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수년간 설량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제조·판매 업체 3곳에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담합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대범죄다.

또 경제 성장을 좀 먹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그간 업체들은 담합 과징금 ‘비즈니스 비용’ 정도로 보고 담합을 반복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8년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상한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드물다.

여기에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이뤄지는 시정명령이 자기업이 담합으로 정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존재하지만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의 담합 사건 이후 실제 발동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다.

부당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기업들은 언제든 다시 담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짜짜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과징금을 더 높이고 엄정한 세부조사로 담합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족이나 민생이 어려운데서 민 먹거리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사설

광주·전남통합법 제정...균형발전 계기되길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는 ‘통합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발의된 지 한 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추진을 선언한 지 59일 만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선도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출범하게 됐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각자의 길을 걸어온 광주와 전남도가 40년 만에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통합 특별법은 인구 320만, 지역 내 총생산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자치단체’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5면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 394개 특례로 구성돼 있고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과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담겨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라는 법인격을 신설하고, 청사는 광주·무안·전남 동부(도청2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토록 했으며 총칭에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특별법은 오는 9일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효력이 발효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먼저 특별법에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데다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제 일부 지방세 전환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져 있어 일부에서는 영속성·지속성 문제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인’ 주 청사 문제는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첨단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도 권역간 갈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간의 불균형 해소도 숙제로 남아 있다.

통합특별법이 이같은 과제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광주 각화동 농산물시장, 효령동 이전 기대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북구 효령동 일원으로 이전한다.

광주시가 고속도로 접근성,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따른 사업 추진 신속성 등을 기준으로 효령동과 용진·용강동 일대를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일대는 교통 요충지로 입지 조건이 탁월한데다 기존 부지(5만 6206㎡) 대비 약 6배 규모인 32만㎡의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유통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사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30여년간 광주·전남·전북 등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온 호남권 최대 공영 도매시장이다. 하지만 1991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대대적인 보수나 확장 없이 운영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고 부지 또한 협소해 주차난과 악취, 주거환경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200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에 선정돼 이전을 추진했지만 상인 반대로 무산됐다. 2019년 이후 이전사업 재추진에 나섰고, 2023년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이번이 이전 건립 부지를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는 울 상반기 농식품부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참여,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 3149억원을 투입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새 농산물도매시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종합물류동과 함께 20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배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예정 부지 일대를 향후 5년간 실수요 목적의 거래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이곳에 전남의 산지와 광주의 도매시장을 연계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 물류 효율성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을 동시에 실현시키기로 한 것이다.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광주시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